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87
----------	------

발의연월일 : 2024. 8. 28.

발 의 자 : 임미애 · 김정호 · 김한규
조계원 · 오세희 · 조인철
박민규 · 권향엽 · 허영
김용민 · 이훈기 · 윤건영
박희승 · 위성곤 · 허성무
양부남 · 전진숙 · 백승아
홍기원 · 이용우 · 강준현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일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금융·신용·보험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및 결정, 선지급의 중지, 선지급금의 반환 및 회수 등 선지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신설).

- 바.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 사.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파기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27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양육비 선지급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은”을 “제1항 각 호의 자는”으로 한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2. 법원행정처장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를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제출한”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한”으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양육비 선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지급을 결정한다.

③ 양육비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선지급 금액 기준은 부모합산소득(소득세 차감 전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양육비(전국의 양육자녀 및 부모가 각각 2인인 4인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소요되는 평균양육비를 말한다)표에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

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한 후 산출되는 실질양육비와 그 실질양육비 중 양육비 채무자가 분담하여야 할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부모의 재산 수준

2. 미성년 자녀의 수

3. 자녀의 거주지역

4.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

5. 비양육부·모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④ 제3항에 따른 실질양육비 중 양육비 채무자가 분담하여야 할 비율은 부모합산소득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선지급을 하는 경우 그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 선지급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및 통보 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

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가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⑧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이하 “선지급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육비 이행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법인 및 시설 등에 자료 이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이용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법인 및 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
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때
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
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
게 알려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7항에 따라 양육비 선
지급이 중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

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자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나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과 결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2.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7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

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 ⑤ (생략)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⑤ (생략)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u>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u> 5. ~ 10. (생략) ⑦ · ⑧ (생략)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u>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u>4. 양육비 선지급</u> 5. ~ 10.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요청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2. 법원행정처장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
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
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
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
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
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
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
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
료

② -----
제1항 각 호의 자는-----
-----.

<삭 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삭 제>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삭 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
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
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
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
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
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
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
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삭 제>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신설>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을-----
-----. <단서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의 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⑤ 제4항-----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

-----.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⑧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방법 및 절차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양육비 선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지급을 결정한다.

③ 양육비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선지급 금액 기준은 부모합산소득(소득세 차감 전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양육비(전국의 양육자녀 및 부모가 각각 2인인 4인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소요되는 평균양육비를 말한다)표에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한 후 산출되는
실질양육비와 그 실질양육비
중 양육비 채무자가 분담하여
야 할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1. 부모의 재산 수준

2. 미성년 자녀의 수

3. 자녀의 거주지역

4.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및 의
료비

5. 비양육부·모의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④ 제3항에 따른 실질양육비
중 양육비 채무자가 분담하여
야 할 비율은 부모합산소득에
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 차
지하는 비율과 같은 것으로 본
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
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한 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
(선지급을 하는 경우 그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포함

한다)를 결정하여 선지급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및 통보 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가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⑧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신 설>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질문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이하 “선지급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육비 이행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 환경 및 소득·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가족관계

<신 설>

등록전산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
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
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
· 단체 · 법인 및 시설 등에 자
료 이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이용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 단체 · 법인 및
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
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
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
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
야 한다.

<신 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7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신 설>

<신 설>

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
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
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
리원의 장은 지급된 양육비 선
지급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거
나 회수 금액을 감경할 수 있
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p>제23조(수수료) ① · ② (생략) <u><신 설></u></p>	<p><u>2.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자</u></p> <p>제23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나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u></p> <p><u>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과 결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u></p> <p><u>2.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7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u></p>
<p>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p>	<p>제24조(업무의 위탁) ① ----- ----- ----- -----</p>

<p>탁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5. (생략)</p> <p>② (생략)</p> <p>제27조(벌칙) ① <u>제17조제5항을</u>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u> <u>파기</u></p> <p>4.·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벌칙) ① <u>제17조제7항</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u> <u>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u> <u>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u> <u>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u> <u>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u> <u>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u></p>
---	---